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8명 현안 해결 원팀 공조

22대 국회 첫 예산정책간담회...국비 확보 역량 결집 결의
입법·현안사업 22건·국비사업 20건 4768억원 확보 건의
이달 중 무안 방문 주민 설득 '군공항 이전' 힘 보태기로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결의했다. 현 정부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완료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정치 변방' 취급을 받고 있는 광주의 처절한 현실이 굳건한 '정치-행정' 원팀 구성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광주시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국회의원 모임 대표인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정진욱, 안도걸, 조인철, 양부남,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 등 광주 지역구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복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가칭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남부경제권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교부세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7건의 입법 건의를 했다.

또한, 오는 2028년 만료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민간 통합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방향 설정이 필요한 지역 현안 법안 3건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밖에 핵심 현안 사업인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사업 예타 면제 ▲복합소평물 예정지 일대 교통인프라 확보 ▲미래차산단 교통 인프라 광주시해안선 신설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

발 국가계획 반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정상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18 대표사적지 역사 클러스터 구축사업 ▲광주-민군 통합공항 이전 ▲광주 평동 군 훈련장 (포사격장) 폐쇄 ▲무등산 정상 전면 개방 (방공포대 이전 추진) ▲기후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사업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등 12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강조했다. 시는 특히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비 사업으로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조성사업, 국산AI반도체 도시규모 살-검증 지원센터 구축,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노후상수관 정비 등 20건 4768억원의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의 협조 요청에 대해 "광주시와 원팀이 돼 광주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AI) 실증밸리, 도시철도2호선, 복합소평물, 달빛철도 등 지금껏 보지 못한 대전환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광주의 변화 발전은 국회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새롭게 시작한 22대 국회와 힘을 합쳐 '2030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조만간 '광주-민군통합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을 방문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항 이전 사업에도 힘을 보태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관광 인프라 몰린 백두산 천지 지난 11일(현지시간)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를 보려는 관광객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했던 여행업계가 활력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중 전세기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을 비롯한 백두산 관광 인파가 몰리고 있다. 무안-중국 연길 전세기(주 2회)는 오는 7월까지 예약이 완료됐다. 중국 측이 3월 자신들의 영역에 포함된 백두산 일부를 '청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해 우리 이름 백두산이 국제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백두산=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통령실 "푸틴, 며칠 안으로 북한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 마련된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도 있다"며 "우리가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주변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당정, 개선안...처벌·제재 강화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할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

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간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